

광역 생태네트워크 지도 만든다

-충남도 '정맥중심 국내처음'·'금남·금북정맥 내달부터 조사'

금남·금북정맥(錦南·錦北正脈) 등 충남의 핵심 생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자연환경조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이를 토대로 2010년까지 충남 전역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 환경생태지도(biotop map)가 제작된다. 정맥 중심의 생태지도 제작은 국내서 처음이다.

22일 충남도는 2008년까지 금남·금북정맥, 금강, 서해 연안 등 충남의 핵심 광역생태축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첫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한편 환경 NGO와 환경생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충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단'을 다음 달 초까지 구성기로 했다.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단은 자연환경조사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충남도는 자연환경 조사와 병행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모두 36억원을 투입해 광역 생태지도의 제작에도 들어간다.

환경생태지도는 금남·금북정맥, 금강, 서해 연안, 환경보전지역의 종합 환경실태 및 동·식물 서식현황을 도면화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생태지도

작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 생태축의 생태환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생태지도가 제작되면 충남 전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생태지도에는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등 금남정맥 4개지역과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연기, 청양, 예산 등 금북정맥 7개 지역의 생태환경이 담길 예정으로 정맥 중심의 생태지도 제작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충남도는 우선 내년에 천안, 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지도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맥은 우리나라 산줄기의 옛 이름이며 금북정맥은 경기 안성 칠장산에서 충남 대안 인흥 지령산에 이르는 292km의 산줄기를, 금남정맥은 전북 무주 주화산에서 충남 부여 부소산에 이르는 131km의 산줄기를 각각 일컫는다.

충남도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해 환경생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생태지도 제작은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충청남도내 산업단지 16곳 내년 조성

-국가 1, 지방 12, 농공 3개... 경제 활성화 기대-

내년에 충남지역에 16개의 산업단지가 신규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내년에 도내에 국가산업단지 1개와 지방산업단지 12개, 농공단지 3개 등 모두 16개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로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 중 아산 둔포단지(일명 아산테크노밸리)와 당진 송산단지 등 2개는 최근 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서산 대산단지(현대오일뱅크단지)와 대산2단지(쑤에쓰오일단지), 연기 전의단지 등 3개는 실시계획을 마련 중이다.

또 공주 사곡단지와 예산 합덕단지, 보령 영보단지 등 3개는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뒤 도와 협의 중이며, 천안 풍세단지와 차암단지, 공주 탄천단지, 서산2단지 등 4개는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아산 도고단지와 둔포2단지, 공주 모물단지 등 3개 농공단지도 내년 착공을 앞두고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입주희망 업체가 없어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도 내년 말 착공식을 갖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4개와 지방산업단지 27개, 농공단지 73개 등 모두 104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동 중이다.

서천 장항산업단지 연내착공하라

- 정부, 이번주 구성안등 후속조치 발표 -

정부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관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원점 차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장항곶별 매립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찬반 갈등이 너무 거센데 따라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민관공동특별위를 구성, 특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주 중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그동안의 정부 검토결과와 민관특위 구성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찬반갈등이 거세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민관특별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며 "특위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특위 구성은 새만금사업이나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여부분쟁 등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1999년 공사를 전면중단한 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했으며, 2003년 6월에는 새만금건축사업의 지속 추진을 전제로 새만금 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 재논의 했었다.

지난해 8월에는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해 한탄강댐 건설을 확정짓기도 했다.

그러나 서천군에선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만큼 하루 속히 장항산단 조성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장항산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17년이나 됐지만 정부가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대로 착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